

4차 핵실험과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hkkim68@mofa.go.kr

I. 들어가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의 허를 찌르며 2016년 1월 6일 실행되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평양시간 오전 10시)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를 진원지로 인공지진이 감지되었으며, 북한은 공식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제사회는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강화될 제재의 수위와 범위에 관해 심각하게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는 향후 대북 제재는 금융, 에너지, 무역 제재를 포함하는 경제 제재가 그 중심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는 2015년 7월 14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구상의 핵확산과 위협에 관해 다음 과제로 여겨졌던 북핵문제의 해결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수준에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발사 실험 성공 여부에 관한 논란을 포함하여 이번 4차 핵실험에서도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측의 발표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 전문가들이 4차 핵실험 시 감지된 지진의 규모(4.8mb)가 2013년 2월의

* 이 글은 김한권,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전망』, 2016의 내용을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전략적 고려라는 주제와 논문의 형식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글이다.

3차 핵실험(4.9mb) 때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는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의 성공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1차에서 4차까지 핵실험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 오며 핵기술의 고성능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온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UN 안보리 결의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수준에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도 북한 핵기술의 경량화, 소형화 작업이 계속되고, 또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들이 실효적인 조치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제재효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4차 핵실험을 실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강화될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역시 과거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또는 위성) 발사 실험들에 대한 제재들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를 현재의 동북아 정세, 특히 역내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와 이에 따른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제재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의해 보고자 한다.

II. 북핵 제재를 둘러싼 한미일과 중러의 입장 차이

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행하자 당일 중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제재를 통한 압박보다는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강화될 UN 안보리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장해 온 한국, 미국,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망스러운 반응을 넘어 이번에도 3차 핵실험 때와 같이 중국의 소극적인 협력으로 인해

1)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 聲明” (<http://www.fmprc.gov.cn/web/zyxw/t1329851.shtml>, 검색일: 2016. 1. 6).

북한 제재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타났다.

북한의 핵위협이 당면한 국가 안보문제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실망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그간 박근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전시켜 온 한중 신뢰 우호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과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한중관계 발전방향의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는 중국의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과 북한의 강한 반발로 인해 급격히 경색되었다. 당시 중국의 새로운 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은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특사 최룡해를 차갑게 대하였고, 막판에 성사된 최와의 면담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한국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물론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러한 ‘희망적 사고’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북중관계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긴밀하게 발전해 온 한중 우호관계를 비교하면서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강화될 대북 제재 조치들에 중국이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협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15년을 거치며 시진핑 주석은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과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11월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동일한 표현이 포함된 공동 성명서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표명해 왔었다. 게다가 2015년 3월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에 가입을 공식 발표한 점과 같은 해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포함한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북 제재에서는 중국이 답할 차례라는 시각도 나타났었다.

1. 중국의 입장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입장은 지난 3차 핵실험 때와 비교해 근본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의 4차 핵실험에 관한 공식 성명이 발표된 직후 내용 중에서 1, 2, 3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서에서 공통되게 나타났었던 “중국정부는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하고(中國政府呼吁有關各方冷靜應對)”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1월 7일 케리 美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의 전화통화 당시 왕 부장은 “동시에 기타 각국의 냉정한 행동 또한 필요하며(同時其他各方也要冷靜行事)”라고 다시금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²⁾

조금 더 자세히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살펴보자. 그간 북한의 핵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여 이끌어 낸 UN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4차례의 중국 외교부 공식성명 내용의 변화 추세를 비교해 본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미중의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의 공식 성명서는 1차에서 4차로 가며 글자 수가 줄어들고 표현이 순화되는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서에는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실시”라는 강한 비난의 표현을 썼으나, 2차 성명서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라졌다. 또한 1차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서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無視)하고”라는 표현을 썼으나, 3차 성명서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不顧)”라는 표현으로 완화되어 있다.

이 외에도 6자회담과 관련된 표현으로 1차와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는 “북한이 다시 6자회담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요구(強烈要求)”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3차 성명에서는 북한을 가리키지 않는 대신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하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국은 견지(堅持)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4차 성명에서는 “대화과 협상을 통해(通過對話協商)”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견지한다(堅持通過六方會談框架解決半島核問題)”라고만 적혀 있다.

반면, 북한의 핵과 위성/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오며, 북한의 UN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온 UN 안보리 결의의 내용들은 앞서 거론한 중국의 성명서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결의의 조항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가 간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지며, 결국 공식적인 통과와 발표까지 소용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718은 총 17개 조항과 통과까지 총 5일이 걸렸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874는 총 34개 조항과 통과까지 1718때에 비해 13일이 늘어난 총 18일이 소요되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2094는 총 37개 조항으로 1874에 비해 3개 조항이 늘어난 데다 부속서(Annex) I, II, III 그리고 IV까지 추가되어

2)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16年1月8日外交部發言人華春瑩主持例行記者會”(http://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_673025/t1330394.shtml, 검색일: 2016. 1. 8).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의 조치가 취해진 개인과 기업들, 수입이 금지된 핵/미사일/화학무기에 관련된 품목들과 사치품목들이 명시되었으며 통과까지 총 23일이 걸렸다.

2. 러시아의 입장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의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한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러시아 또한 대북 제재에 관해 UN 안보리에서는 물론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서 중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러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대북 제재에 관해 신속히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시리아 사태와 함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지난 1월 11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본 민자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만나 양국은 북한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UN 안보리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날 라프노프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북한 핵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공식입장 표명에서 평양의 핵무기 발전은 국제법과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flagrant violation)이라 표현하며, 이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으로 가득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북아에서 더 이상의 제어할 수 없는 긴장 고조를 만드는 행동을 피하는 관련국들의 자제를 요구했으며, 6자회담의 틀에서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지지함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³⁾

비탈리 추르킨(Vitaly Churkin) 駐UN 러시아 대사도 6일 북한 핵실험에 대해 “냉정(cool heads)”과 “비례적인 대응(proportionate response)”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이고르 모르글로프 외무차관은 4차 핵실험 직후인 6일 성 김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지며 북핵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 이외에 다른 방안이

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mment by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ria Zakharova on the DPRK’s announcement of a hydrogen bomb test” (http://www.mid.ru/en/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onkJE02Bw/content/id/2004721, 검색일: 2016. 1. 6).

없으며, 역내에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이어 13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의 운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며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안보리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브로프 장관은 안보리의 조치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추가적 긴장 악화가 없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대북 제재 공조 움직임은 북러관계,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된다. 벌써부터 러시아 일각에서는 그간 북러 간 논의되어 왔던 경협사업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상당 부분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연구소 유라시아 통합과장은 2015년 12월에 체결한 전력협력 협정에 의해 전력기술 교류, 전력 에너지 공급,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협력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3차 시범운송까지 진행된 라진-하산 프로젝트, 북러 간 입국비자 간소화 조치, 가스관 사업, 러시아 극동 개발부와 철도청이 검토 중이었던 북한 철도망 현대화 작업 참여 등이 모두 중단 또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⁶⁾

3. 미일의 입장

미일의 입장은 중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UN을 통한 제재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법을 통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제재에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려는 중국에게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역내에서 한미일의 강화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1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2차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이다. 당시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을

4) 『Voice of America』,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문제, 정치적 해결 외 대안 없어”」, 2016. 1. 8.

5) 『연합뉴스』, 「운병세 “긴밀히 공조하자”, 러 라브로프 “긴장악화 안 돼”」, 2016. 1. 13.

6) 『Voice of America』, 「북한 핵실험으로 러시아와의 경협사업 중단 가능성」, 2016. 1. 16.

강조했던 토니 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은 남중국해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한편으로 중국의 진정성 있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차 핵실험과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협력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연구센터 부루스 클링거 등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현실적 대안으로 고고도미사 일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체계의 배치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⁷⁾

일본은 미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며 지역 내에 존재하는 북한 핵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미일동맹 강화와 2015년 9월 안보법제 통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 내에서 자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4차 핵실험 이후의 전개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에 한국이 동참하고 남중국해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8일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2014년 12월 체결) 활용을 포함한 한일/한미일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제2차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日 외무성 사무차관이 대북 제재 논의와 함께 남중국해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블링큰 부장관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III.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공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미 ‘트리거 조항’이 포함된 UN 안보리 결의

⁷⁾ Bruce Klinger, "How the U.S. Should Respond to North Korea's H-Bomb Test," Newsweek, January 6th, 2016.

2087과 2094에 동의한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로서 국가 간의 약속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 동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적극성을 나타낼지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이다.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도 제재 강화의 수위를 놓고 심각하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제재 강화 수위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고민을 거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북중관계 또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하에서 보지 않고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의 틀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변화가 없다면 중국은 결국 3차 핵실험 때와 유사한 수순을 밟으며 또다시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하는, 즉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핵문제를 단기적으로는 동결과 관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이 지난 4차례 핵실험을 목격하며 북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역내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져 온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존재 그 자체로 중국에게 동북아에서는 對美 전략적 완충지이자,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담보하는 對한국 레버리지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 또한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에서 남북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것이 현존하는 동북아 미중 간 힘의 구도하에서 최상의 한반도 시나리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김정은 체제의 붕괴 또는 북한 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에너지, 무역 등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중국의 네티즌과 다수의 인민들이 북한에 대해 분노하고,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이제 중국에게도 안보와 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대부분이 3차 핵실험 때도 거론되었던 문제들이었으며, 당시에도 중국은 결국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했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세 번 하거나, 네 번 하거나, 또는 원자탄 실험을 하거나, 수소탄 실험을 하거나 근본적으로 느끼는 위협의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 및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법제 통과와 더불어 미국의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추구하고 THAAD의 한국 내 배치를 필두로 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역내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역내 경쟁 구도를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전략적 계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고려는 2014년 말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사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침내 2015년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 조선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며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최근 추구해 온 북중관계 개선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강경한 반대와 비판의 입장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무역을 포함한 북중 경제협력에서도 한동안 그 파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중의 동북아 경쟁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전략적 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역내 무력도발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느끼고 있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G-2로 불리는 위상과 영향력을 갖춘 중국이지만 종합국력 면에서 아직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다시금 미국에 대한 low-profile 외교를 유지하는 ‘新도광양회’ 전략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의 덩샤오핑과는 다르게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논쟁의 부분으로 만든 후 갈등과 충돌을 우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부상하는 동안 안정적인 주변 환경과 미중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결국 시간은 중국의 편이고 중국의 부상이 마무리되면 현재의 논쟁적인 이슈들을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흐르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까지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장기적 전략구도에 고민을 점차 더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대로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인해 중국과 미일동맹 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마저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딜레마는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당분간 북한 포용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마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와 THAAD의 한국 내 배치를 포함한 미국 주도의 MD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강조하며 적정 수준의 대북 제재 강화에 동의하고 이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여론이 급격히 미일동맹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에 머물러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IV. 결론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반대의 입장과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수준의 대북 제재 강화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지역에서 고조되어 온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궁극적으로는 3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과의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중국의 협조에 매달리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북한 핵공격의 유일한 대안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하자는 반응이다. 둘째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 카드를 교환하는 협상을 계속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강경책을 따른다면 동북아의 지형도는 결국 한미일 對 북중러의 新냉전 구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북한이 바라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대북 제재 공조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분열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냉전 구도가 동북아에 나타난다면 한국이 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목표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북한과의 평화 체제를 논의하고 핵무기와의 교환을 추구하는 협상론도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의도는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체제 안정을 강대국들의 안정보장 약속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이루겠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성능 고도화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핵보유 국가임을 기정사실로 한 후, 대미, 대중, 남북 관계의 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동북아 新냉전 구도의 방지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특색을 이해하고 너무 서두르거나 한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자제하며 중국의 추이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이 3차 핵실험 때와 같이 다시금 북한을 포용하는 모습이 발생한다면 결국 동북아에서는 국가 간의 편 가르기에 이은 신냉전 구도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구도하에서는 결국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이 가지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려에 대해 신뢰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 5자회담의 필요성

한국은 동북아에 출현할 수 있는 신냉전 구도의 방지를 위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며 북한의 자리를 비워 둔 5자회담의 개최를 주도해야 한다. 4차 핵실험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논의에서 미중 간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 5개국들 간에 분열과 편 가르기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자회담의 개최는 회의 성사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며 1)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과 대선 시즌으로 접어드는 것을 계산하고, 2) 중국 또한 경제가 경착륙의 우려마저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상황이 4차 핵실험의 적기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계산은 전략적 오판이라는 것을 5자회담을 통한 대북 제재 공조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만약 한미중의 북핵 대응 공조와 높은 수준의 금융, 에너지, 무역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전략적 오판이라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핵개발 프로그램이 북한의 권력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분열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5자회담의 합의를 통해 대북 제재가 강화된다면 북핵문제에서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3.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들

한국은 5자회담을 통해 미중 간의 이견차를 해소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의 접근 틀이 기존의 ‘핵무기 보유 vs. 경제적 이익’ 또는 ‘핵무기 보유 vs. 평화협정 체결’의 틀에서 벗어나 ‘핵무기 보유 vs. 김정은 체제의 생존’ 틀로의 분명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따르고 있으며, 북핵은 협상용이 아닌 김정은 체제의 안보를 위한 수단이며, 현재 정권 유지가 체제의 최우선 목표인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다른 어떤 협상 카드와도 교환이 불가능함을 국내외에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핵무기 보유 자체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포기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체제의 안전을 강대국의 약속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의 접근 틀은 금융, 에너지, 무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 제재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 체제 스스로가 핵무기를 보유해도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4.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관한 선택의 폭 확대

한국은 우선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근본적인 구도가 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또한 기존의 ‘전략적 북한 포용’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한국은 5자회담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특화된 한미중 3국 전략대화의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한국은 한미중 3국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응으로 단계적인 경제 제재 강화를 미중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단계적인 대북 경제 제재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반응과 체제의 안정성을 미국과 함께 면밀히 살피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방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밝혀 왔듯이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교류를 통한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